

발간등록번호
2022-KIHF-054

2022년 제1차 온라인 가족포럼

전환기 가족정책 방향찾기

한국가족의 변동과 가족정책 대응

일 시

2022. 05. 11.(수) 14:00 ~ 16:00

영상공개

2022. 05. 24.(화)

장 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513호 회의실

주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후원



여성가족부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금옥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정책서비스 중심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국회, 정부부처, 국민과 지역센터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었고, 이제 코로나19를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가족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규모와 기능, 형태의 변화가 빠르게 변동하고 있는 시기,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기 가족정책의 방향 찾기; 한국가족의 변동과 가족정책 대응』이라는 주제로 2022년 제1차 온라인 가족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가족포럼은 다양한 가족 관련 전문가, 국민들과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가족정책서비스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변수정 연구위원님, 토론을 맡아주신 양정선 실장님, 장훈성 센터장님, 조성은 연구위원님, 좌장이신 손서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변화의 시기에 다양한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 제언과 좋은 의견, 경험을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우리 사회의 기본체계로, 가족정책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가족의 변화 방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가족 형태와 인식, 구성방식 등의 변화가 가져온 가족정책 이슈를 검토하고 가족정책 현황과 정책 과제를 진단하여 가족정책 서비스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서비스를 전달하는 현장의 의견과 사업사례를 듣고 대응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제안되는 정책들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정책 환경 변화가 정책 발전의 계기가 되고 사회 연대와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발표자 및 좌장,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수고해주신 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프로그램

▷ 개회

인사말 : 김금옥 이사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발제

전환기 가족정책 방향 찾기 • 한국 가족의 다양성과 향후 과제
- 변수정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가족연구센터)

▷ 토론

좌 장 : 손서희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토론 1]

전환기 가족정책의 지향

- 양정선 실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토론 2]

가족변동에 대응한 가족센터의 방향

- 장흔성 센터장 (경상북도 가족센터)

[토론 3]

전환기 가족정책 방향 찾기, 개인의 선택에 대한 존중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

- 조성은 연구위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미래전략단)

▷ 폐회

* 목 차 Contents

[발 제]	전환기 가족정책 방향 찾기 - 한국 가족의 다양성과 향후 과제	09
	❖ 변수정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가족연구센터)	
<hr/>		
[토론 1]	전환기 가족정책의 지향	29
	❖ 양정선 실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hr/>		
[토론 2]	가족변동에 대응한 가족센터의 방향	37
	❖ 장흔성 센터장 (경상북도 가족센터)	
<hr/>		
[토론 3]	전환기 가족정책 방향 찾기, 개인의 선택에 대한 존중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	45
	❖ 조성은 연구위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미래전략단)	

2021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1차 온라인 가족포럼

발 제

전환기 가족정책 방향 찾기

- 한국 가족의 다양성과 향후 과제

변수정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가족연구센터)

전환기 가족정책 방향 찾기

한국 가족의 다양성과 향후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목 차

- 1 혼인 및 출생과 인구 변동
- 2 가족 변동과 다양성
- 3 가족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과 태도
- 4 가족 다양성 정책과 향후 과제

1. 혼인 및 출생과 인구 변동

1. 혼인 및 출생과 인구 변동

인구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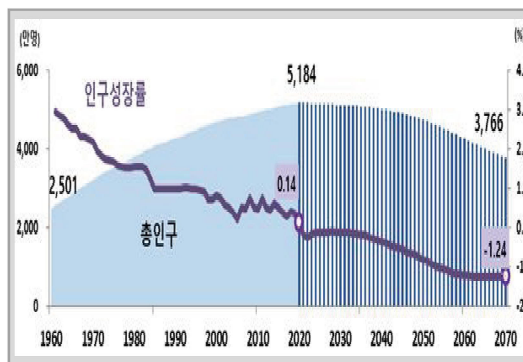
• 총인구

✓ '20년 기준 5,184만 명에서 감소 → '30년 5,120만 명 수준으로 감소→' 70년 3,766만 명(79년 수준)에 이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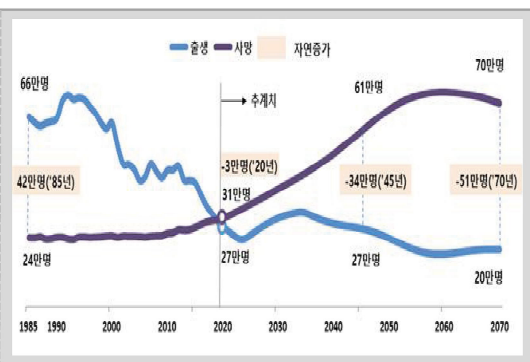
• 인구성장률

✓ '21~35년까지 -0.1% 수준, '70년 -1.24% 수준

【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960~2070년) 】



【 출생.사망.자연증가(1985~2070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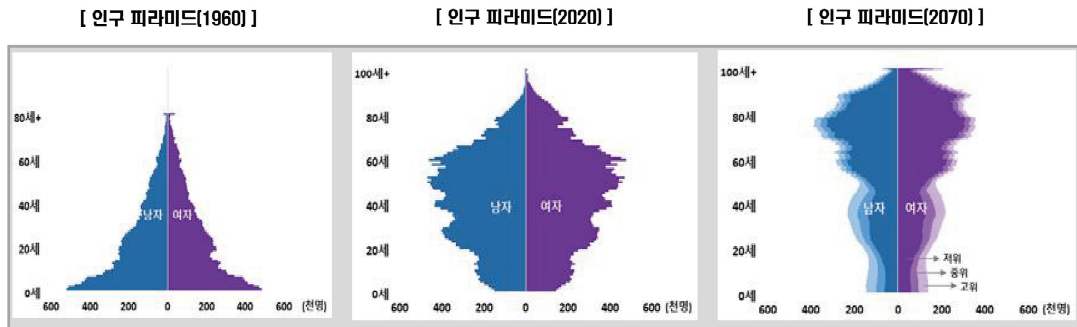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21.12.9.). 장래인구특별추계: 2020~2070 보드자료.

1. 혼인 및 출생과 인구 변동

인구구조 변화

• 인구피라미드

✓ 현재는 30-50대가 많은 항아리형 → 60세 이상이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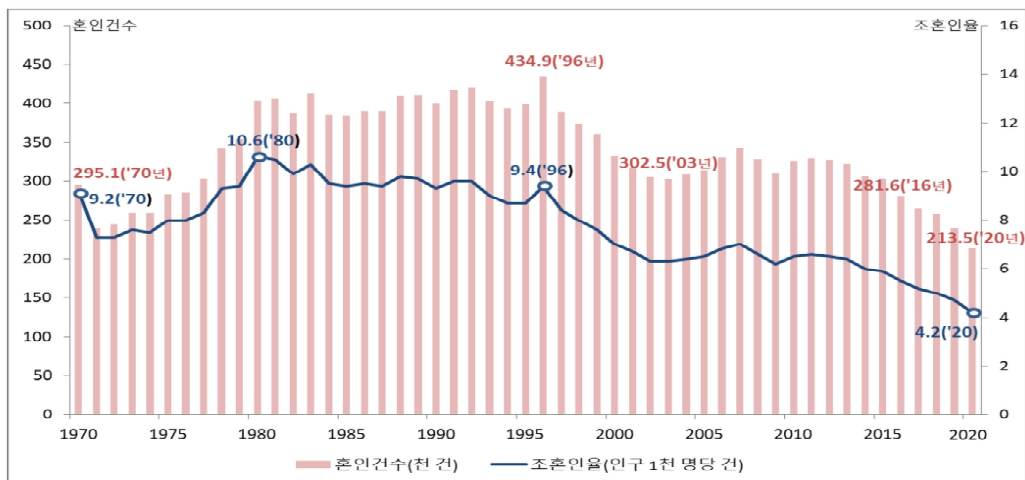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21.12.9.), 장래인구특별추계: 2020~2070 보도자료.

1. 혼인 및 출생과 인구 변동

혼인 추이

• 혼인의 감소

- ✓ (혼인건수) '20년 기준 21만 4천 건
- ✓ (조혼인율) '20년 기준 4.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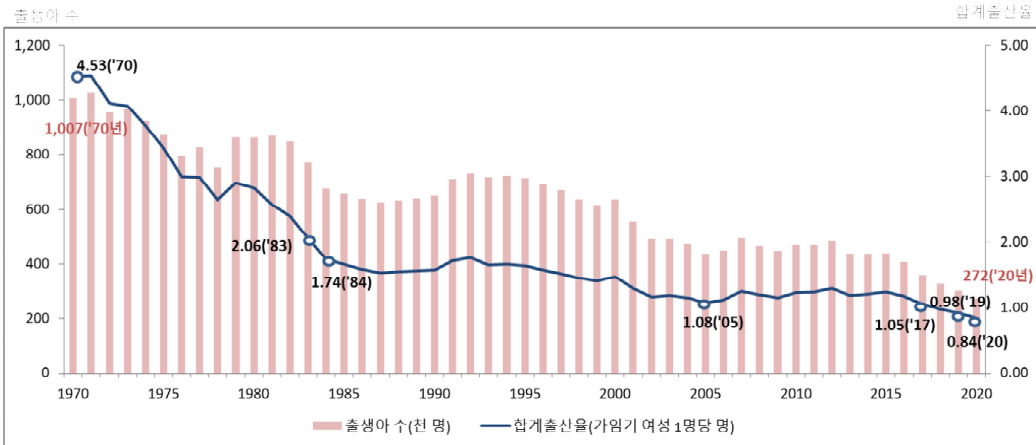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각연도), 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

1. 혼인 및 출생과 인구 변동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 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TFR) 2.1명 이하)이 1983년부터 시작되어 35년 이상 지속
- 2002년부터는 초저출산(TFR 1.3명 이하) 국가에 해당
 - ✓ (출생아수) '20년 기준 27만 2천 3백 명 → 전년대비 10.0% 감소
 - ✓ (합계출산율) '20년 기준 0.84명 →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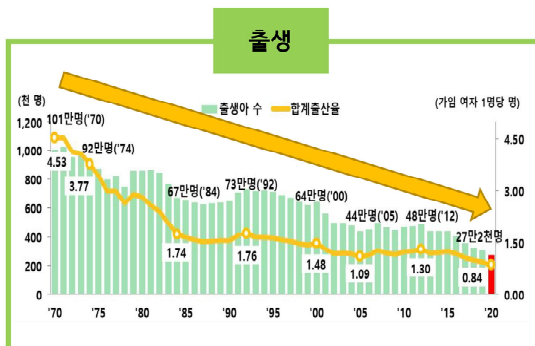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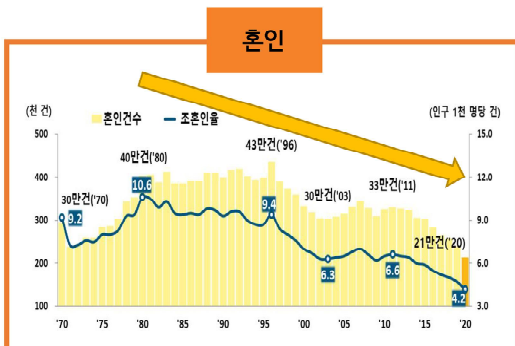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연도) 시군구/인구동태간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

1. 혼인 및 출생과 인구 변동

인구변동 추이의 고착

- 혼인과 출생의 우하향 그래프 고착화
- 혼인해도 출산하지 않는 경우 증가



자료: 통계청(2021.3.18.) 2020년 혼인 이혼 통계 보도자료.
통계청(2021. 8. 25.) 2020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2. 가족 변동과 다양성

8

2. 가족 변동과 다양성

가족의 소규모화

- 혼인 및 출산율 감소 현상은 가구원수 별 비중의 변화와 가족 유형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
 - ✓ 규모 면에서 축소, 유형은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율 증가, 3인 이상의 가구 비율 감소
 - ✓ 결과적으로 평균 가구원 수 감소

(단위: 천가구, %)

	가구수 (천 가구)	가구원수 별 가구구성(%)						평균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0	17,339	23.9	24.3	21.3	22.5	6.2	1.8	2.7
2015	19,111	27.2	26.1	21.5	18.8	4.9	1.5	2.5
2016	19,368	27.9	26.2	21.4	18.3	4.8	1.4	2.5
2017	19,674	28.6	26.7	21.2	17.7	4.5	1.3	2.5
2018	19,979	29.3	27.3	21.0	17.0	4.3	1.2	2.4
2019	20,343	30.2	27.8	20.7	16.2	3.9	1.0	2.4
2020	20,927	31.7	28.0	20.1	15.6	3.6	0.9	2.3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및 연보

9

2. 가족 변동과 다양성

한국의 2020년 가구 구성

1세대 가구	부부	3,518,763
	부부+미혼 형제자매	19,334
	부부+기타친인척	4,739
	가구주+미혼 형제자매	219,314
	가구주+기타친인척	20,118
2세대 가구	기타	111,167
	부부+미혼 자녀	6,086,287
	부+미혼 자녀	506,649
	모+미혼 자녀	1,529,784
	부부+양친	16,523
	부부+할부모	109,222
	부부+미혼 사녀+부부 미혼 형제자매	58,355
	조부모+미혼손자녀	46,688
3세대 가구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	71,017
	기타	777,005
	부부+미혼 자녀+양친	76,825
	부부+미혼 자녀+부친	60,991
	부부+미혼 자녀+모친	281,848
기타		339,884
4세대이상 가구		5,384
1인가구		6,643,354
비친족가구		423,459

(단위: 가구)

구분	1인가구	비친족가구
2015	5,203,440	214,421
2016	5,397,615	269,444
2017	5,618,677	308,659
2018	5,848,594	340,367
2019	6,147,516	386,968
2020	6,643,354	423,459

자료: KOSIS 홈페이지,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일반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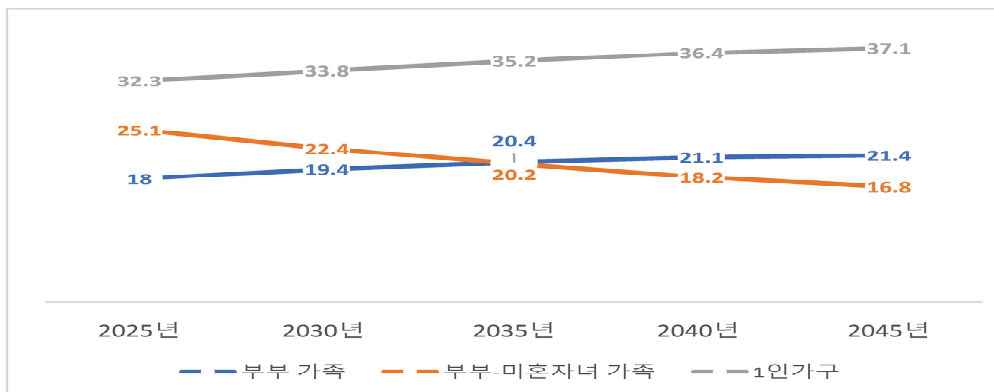
10

2. 가족 변동과 다양성

가족 유형별 추계(2025~2045년)

- 한국의 가족은 지속적인 변화를 할 것으로 예상됨
- ✓ 가족 유형의 측면에서 부부가족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감소 등

(단위: %)



자료: 국가통계포럼 <국내통계> 정례가구추계 <가구주의 연령/가구유형/가구원수별 추계가구

11

2. 가족 변동과 다양성

한부모가구 및 미혼모/부

- 한부모 가족 비율의 유지 및 증가
 - ✓ 한부모가구는 전체 가구 중 7% 정도 유지
 - ✓ 미혼모 수 증가

(단위: 천가구, %)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가구	19,838	20,168	20,500	20,891	21,485
한부모가구	1,540	1,533	1,539	1,529	1,533
한부모가구 비율	7.8	7.6	7.5	7.3	7.1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단위: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미혼모	19,838	20,168	20,500	20,891	21,485
미혼부	1,540	1,533	1,539	1,529	1,533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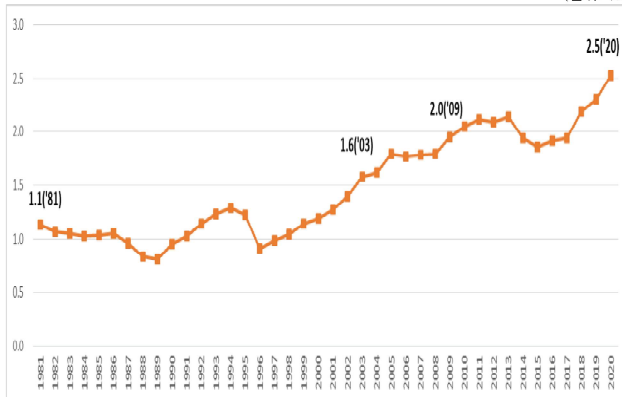
12

2. 가족 변동과 다양성

혼인외 출생

- 전체 출생에서 혼인관계(법적관계)가 아닌 혼인외 관계에서의 출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승 추세
 - ✓ 1990년대 1% 수준 이내에서 꾸준히 상승, 2010년대 들어서 2% 수준
- 전체 출생에서 차지하는 절대 비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혼인제도나 결혼 및 가족 구성이 더욱 유연해 진다면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 한국의 비혼 출산 비율 상승 추세도 지속 가능

(단위: %)



자료: KOSIS > 시도/광역시/광역시별 출생

< 국가별 비혼 출산율 > (OECD, 2018)

(단위: %)

국가	혼인외 출생 비율
OECD 평균	40.7
한국	2.2
프랑스	60.4
스웨덴	54.5
영국	48.2
미국	39.6
독일	33.9
일본	2.3

자료: OECD

13

3. 가족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과 태도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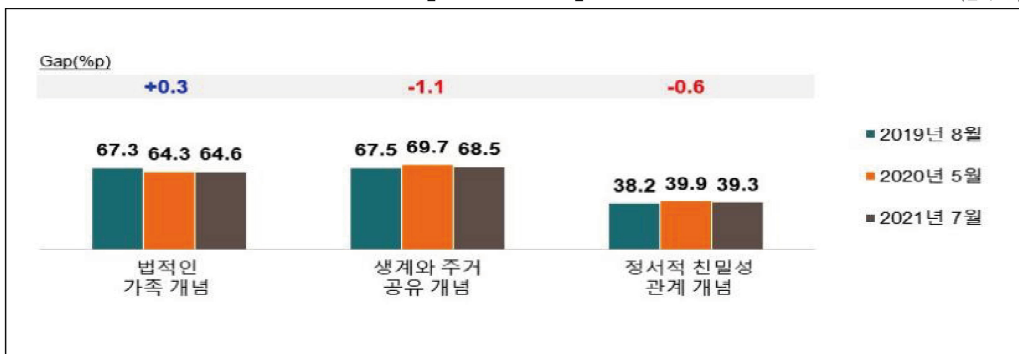
3. 가족 다양성 수용과 태도

관념과 실천의 변화가 동시에 빠르게 진행

- 혼인율의 감소와 함께, 혼인·가족에 대한 관념의 변화와 가족구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돌봄·양육 등 주된 가족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가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가족의 개념 확장
 - ❖ 법적으로 혼인,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 할 수 있다
 - ❖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
 - ❖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

[가족의 의미]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2021).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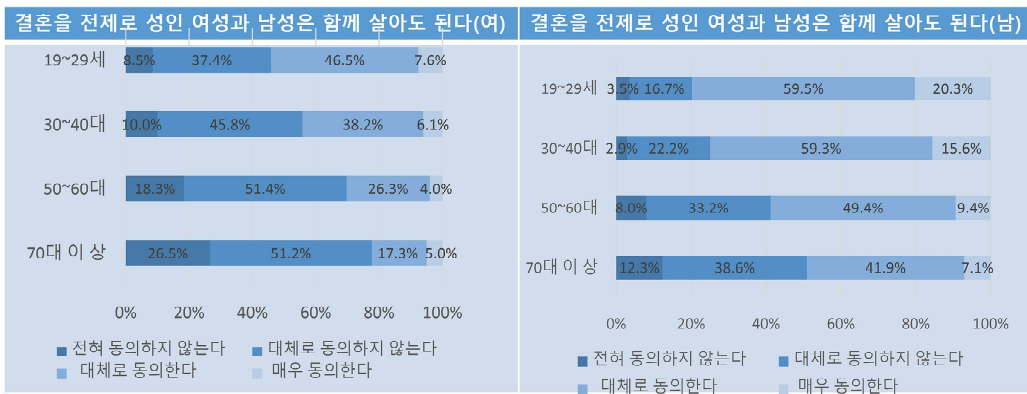
15

3. 가족 다양성 수용과 태도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한 태도

-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전 연령에서 높은 경향이 뚜렷하고, 성별에 따라 과반을 차지하는 경향이 다름
 - ✓ (여성) 2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대에서 동의하지 않는 비율 과반
 - ✓ (남성)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대에서 동의하는 비율 과반
 - 남성 20대: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해 80%가량이 동의하고 그중 약 20%는 적극 동의

(단위: %)



주: 전체 8000명에 대한 응답 결과임.
 자료: 변수정, (2021.3.), 결혼 인과 밖의 가족 형성에 대한 태도. 보건복지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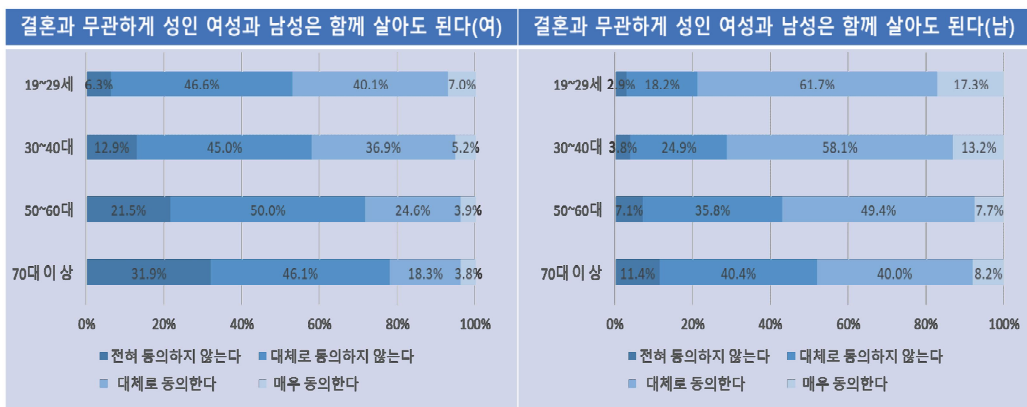
16

3. 가족 다양성 수용과 태도

결혼과 무관한 동거에 대한 태도

-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성인 이성 간의 동거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연령별 견해 분포가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한 생각과 매우 유사
 - ✓ 여성 20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에 동의하는 비율 절반 이하
- 결과적으로 여성은 모든 세대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과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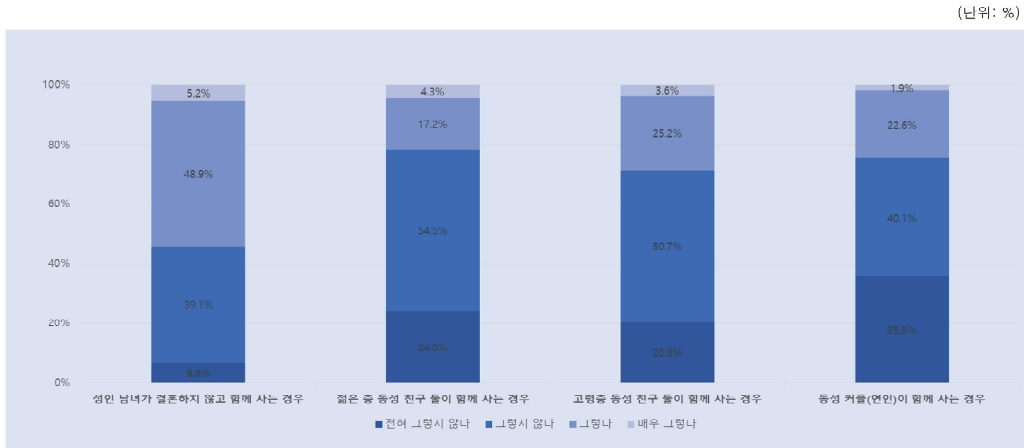
주: 전체 8000명에 대한 응답 결과임.
 자료: 변수정, (2021.3.), 결혼 인과 밖의 가족 형성에 대한 태도. 보건복지포럼.

17

3. 가족 다양성 수용과 태도

다양한 결합에 대한 가족 인정 정도

- 다양한 결합에 대한 다양한 태도
 - ✓ 성인 남녀 사이의 동거는 가족으로 인정하는 비율 절반 수준
 - ✓ 나머지 결합에 대해서는 가족 인정 비율 높지 않은 수준



주: 전체 8000명에 대한 응답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

3. 가족 다양성 수용과 태도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보호에 대한 태도

- 서구의 여러 국가는 함께 사는 동반자 등록 제도를 통해 혼인 관계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기도 함
- 응급 시 보호자 역할을 하거나, 서로 돌봄 및 보호, 또는 기본적인 지원 등 관계를 보호하는 제도에 대한 생각에서 연령별 차이: 젊은 층에서 결혼의 대안적 제도에 대한 욕구 ↑
 - ✓ 고령층 동성 결합에 대한 보호 제도 찬성: 48.9%
- 가족 유형과 관계없는 아동에 대한 지원 지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남녀를 제도로 보호하는 것*에 대한 태도】

(단위: %, 민)

	반대 한다			찬성 한다			(명)
	매우 반대	반대하는 편	찬성하는 편	매우 찬성			
전체	38.1	4.7	33.4	61.9	55.5	6.4	(8,000)
19~29세	27.0	3.0	24.0	73.0	63.3	9.7	(1,360)
30~39세	28.8	2.7	26.1	71.2	63.8	7.4	(1,279)
40~49세	37.0	4.1	32.9	63.0	56.1	6.9	(1,533)
50~59세	41.1	4.6	36.5	58.9	53.7	5.2	(1,590)
60~69세	48.2	6.1	42.1	51.8	47.2	4.6	(1,204)
70~79세	48.3	8.4	39.9	51.7	47.6	4.1	(675)
80세 이상	51.5	9.1	42.4	48.5	45.0	3.5	(360)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 지원*에 대한 태도】

(단위: %)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더 지원해야 한다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더 지원해야 한다
15.9	73.1	11.0

주: 전체 8000명에 대한 응답 결과임.
 자료: 변수정, (2021.3), 결혼 민과 밖의 가족 형성에 대한 태도, 보건복지포럼.

3. 가족 다양성 수용과 태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태도와 제도적 보호

다양한 유형을 ‘가족’으로 명명·인정 VS 실생활에서 보호

- 가족생활 실천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시각
 - 가족이라고 명명하거나 인정하는 것과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태도는 분리될 수 있음
 - 서로를 돌보며 가족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라도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면 서로의 보호자가 되는 것조차 쉽지 않음.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족은 법적인 관계 못지않게 실생활에서 친밀성을 가지고 가족과 같은 생활을 한다면 가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함.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생각이 약한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새롭게 가족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욕구가 높음

가족을 구성하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에 대한 보호 필요

- 현재 동거중인 전 여명이 응답한 동거 이유 중 1순위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여성가족부, 2021)로 동거가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동거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결혼의 대안으로 동거를 택하는 남녀 관계만을 중심으로해서는 가족 다양성을 제대로 포괄할 수 없음. 결혼 중심에서 벗어나 생각하면 가족의 구성 방식은 매우 다양함
 - 한국에서 남남인 누군가와 ‘법적인 가족’이 되는 방법은 혼인신고를 하거나 입양하는 것. 그러나, 혼인신고나 입양이 원하는 모두에게 가능한 것은 아님
- 법적 테두리 내에 있지 않은 관계는 보호나 지원에서도 벗어나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 (2021. 9. 15). “비혼 동거 실태와 정책 방안” 논문집 제1회 부두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

20

3. 가족 다양성 수용과 태도

한국 사회의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인식

[다음의 가족들이 한국 사회의 이상적인 가족에 얼마나 가까운지]

- 여성,남성 모두 일을 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 76%
- 남성은 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 72%
- 엄마 혼자, 아빠 혼자 아이를 기르는 가족 20% 이하

(단위: %)

	이상적이지 않다	전혀 이상적이지 않다	별로 이상적이지 않다	이상적이다	약간 이상적이다	매우 이상적이다
조부모, 부모, 자녀 3대가 사는 가족	37.0	3.3	33.7	63.0	48.7	14.3
남성은 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	28.1	3.0	25.1	71.9	53.8	18.1
여성은 일을 하고 남성은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	65.0	6.7	58.3	35.0	31.4	3.5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을 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	24.4	2.5	21.8	75.6	54.2	21.4
엄마 혼자 아이를 기르는 가족	81.0	9.3	71.7	19.0	17.7	1.3
아빠 혼자 아이를 기르는 가족	84.6	14.8	69.9	15.4	14.0	1.3
남성은 일을 하고 여성은 가사 일을 하면서 아이 없이 생활하는 가족	61.5	6.7	54.8	38.5	35.8	2.7
여성은 일을 하고 남성은 가사 일을 하면서 아이 없이 생활하는 가족	73.8	9.5	64.3	26.2	24.5	1.7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을 하면서 아이 없이 생활하는 가족	52.5	4.5	48.0	47.5	44.1	3.4

주: 전체 8000명에 대한 응답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

21

3. 가족 다양성 수용과 태도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 정도

[한국 사회가 다음의 가족에 대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편견 있다는 의견이 과반인 가족
- 편견 없다는 의견이 과반인 가족

(단위: %)

	편견이 없다	전혀 편견이 없다	별로 편견이 없다	편견이 있다	약간 편견이 있다	매우 편견이 있다
이혼이나 사별로 여성 혼자 아이를 기르며 생활하는 가족	35.6	5.2	30.4	64.4	57.2	7.1
이혼이나 사별로 남성 혼자 아이를 기르며 생활하는 가족	38.9	5.8	33.1	61.1	49.6	11.5
미혼인 여성 혼자 아이를 기르며 생활하는 가족	23.3	2.7	20.6	76.7	46.9	29.8
미혼인 남성 혼자 아이를 기르며 생활하는 가족	22.5	2.6	19.9	77.5	48.9	28.6
(부모 없이) 조부모가 손자녀를 기르며 생활하는 가족	44.7	5.8	38.9	55.3	48.4	6.9
아이가 없는 가족	60.0	11.4	48.6	40.0	35.2	4.8
아이를 입양한 가족	57.2	11.5	45.7	42.8	38.1	4.7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결혼한 가족	56.2	11.0	45.2	43.8	38.8	5.0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한 가족	55.3	10.9	44.4	44.7	39.9	4.8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가족	41.1	4.8	36.3	58.9	50.9	8.0
동성 커플(연인)이 함께 사는 가족	18.8	2.2	16.6	81.2	44.0	37.2

주: 전체 8000명에 대한 응답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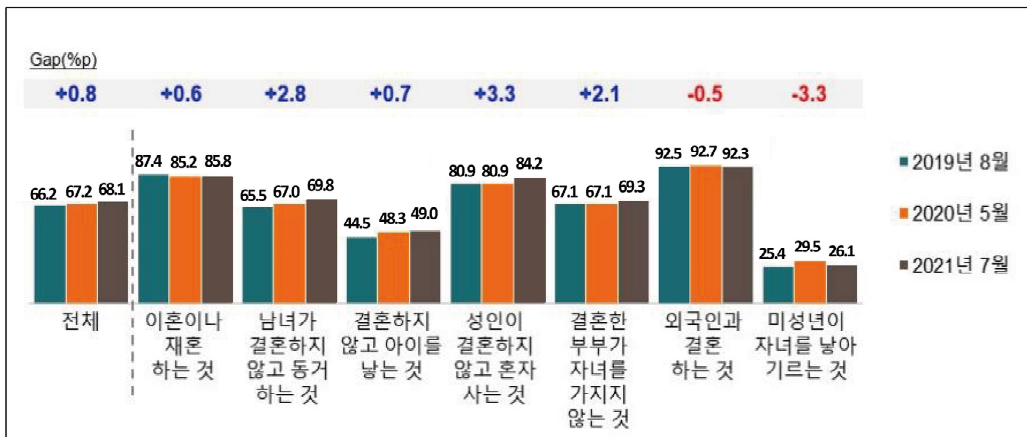
22

3. 가족 다양성 수용성과 태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

- 출산과 혼인의 강한 연결고리가 가족 수용성 측면에서도 드러남
 - ✓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
 - ✓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2021).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3

3. 가족 다양성 수용과 태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개인 태도 차이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 정도와 개인의 편견 정도에 대한 생각 차이
 - ✓ 응답자의 의도적인 도덕적 태도가 반영될 가능성 있으나, 편견이 없다는 비율이 높은 결과는 사회 구성원의 편견을 줄이고 인식 변화를 위한 환경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 ✓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느끼기에 우리 사회가 가진 제도나 정책이 차별적이라고 생각한 결과라면, 개인은 변화와 수용의 준비가 되어 있지만 사회적 환경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음
- 개인은 편견이 없는 쪽에 치우쳐 있는 상황이므로, 제도 및 정책 변화 등 사회가 이끄는 변화가 반영되어 차별이 감소하는 환경으로 나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단위: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개인 편견 정도					미혼모 가족에 대한 사회-개인 편견 정도						
전혀 없다	별로 없는 편이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명)	전혀 없다	별로 없는 편이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2.0	7.5	40.1	50.4	(1005)	미혼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8.6	9.9	45.3	36.3	(1000)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 편견	24.0	31.0	39.2	5.9	(1004)	미혼모가족에 대한 개인 편견	28.8	29.2	36.6	5.3	(1000)

본수정 외(2017), "다양한 가족이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에서 실시한 「다양한 가족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본수정 외(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특성과 정책과제"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 조사」

동거에 대한 사회의 태도					동거에 대한 개인의 태도				
전혀 호의적이지 않음	약간 호의적이지 않음	약간 호의적임	매우 호의적임	(명)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명)
동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태도	44.6	43.7	10.2	1.6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 보는 것도 좋다	20.1	15.5	40.7	23.7
					남녀가 결혼과 상관없이 함께 살 수 있다	30.0	16.8	38.8	14.4

주: 일반국민 1000명당 대상으로 한 결과임
자료: 본수정 외(2016), 「편안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24

4. 가족 다양성 정책과 향후 과제

4. 가족 다양성 정책과 향후 과제

[현재 추진 정책]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내 가족 다양성 과제

추진영역 1.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1-1.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	1-2.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1-3. 가정폭력 대응 강화 등 가족 구성원 인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해소 ◆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 ◆ 가족과 개인이 공존하는 평등한 가족 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한 법률 정비 ◆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발견 및 대응 강화 ◆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통합 지원 강화

자료: 여성가족부(20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4. 가족 다양성 정책과 향후 과제

[현재 추진 정책]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가족유형에 따라 자녀를 차별하는 제도 발굴·정비
 - 가족의 개념 확대 등 법령 제·개정
 -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 및 '건강가정' 용어 등을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 가족 구성 선택권에 대한 정책방향 검토
- 함께 생활하고 돌보는 공동체를 위한 제도 활용 지원

자료: 여성가족부(20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4. 가족 다양성 정책과 향후 과제

[현재 추진 정책]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본계획 내 가족 다양성 과제

추진과제 4-1.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4-1-①.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기반 마련	4-1-②. 다양한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 강화	4-1-③.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 생활·돌봄공동체 관련 법제 마련 ◆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의 보호 법제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 ◆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자료: 대한민국정부(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4. 가족 다양성 정책과 향후 과제

[현재 추진 정책]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기반 마련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 건강가정기본법 상의 혼인·혈연·입양 중심의 가족 정의를 가족의 다양성·유연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
 - '건강가정'이란 용어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족 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정
-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호가 요구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민법 상 혼인·혈연을 기준으로 하는 가족의 범위 개정 필요성 검토
- 다양한 가족의 삶이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금지·예방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가칭)평등법」에 대한 국회 논의 지원
 - ※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 등에 따른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차별의 구제 등을 명문화
- 가족 형태 및 상황에 대해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낙인효과 및 차별 방지
 - ※ 고용, 교육, 행정서비스 등 각 영역에서 공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제출요청 시 목적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법제화

생활·돌봄공동체 관련 법제 마련

- 서로 돌보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정의, 보호내용·방식·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가칭)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추진
 - 다양한 가족의 삶이 사회적으로 실체화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법적 현황 진단 및 정책수요 파악

자료: 대한민국정부(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4. 가족 다양성 정책과 향후 과제

[새로운 국정과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여가부 법무부 농식품부)

□ 과제목표

-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를 통한 인권친화적 수용환경 조성
- 이주민 인권개선 등을 통해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
-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안전한 반려문화 조성

□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위기청소년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 진로·직업 교육훈련 확대, 청소년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강화
-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단계적 상향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지원)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계 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 (다양한 가족 지원) 청소년 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 교정시설 신축 및 중·개축을 통한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 및 수용자 인권 보호 전담부서 신설 추진
-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이주민 인권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이주민 권익 증진
- (동물복지 강화)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지원으로 보호 수준을 높이고, 동물학대 및 개물림사고 방지 제도 강화
 ※ 동물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 (법정형 최대 징역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 기대효과

-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다문화가족 자녀, 1인가구, 청소년 부모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로 삶의 질 개선
- 수용자 인권보호 및 사회재통합 촉진, 이주노동자·난민 등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사회통합지수 5년 내 현행 68점 → 80점 이상 목표)

자료: 제20대 이통발전위원회(2022), 유선영정부 110대 국정과제.

4. 가족 다양성 정책과 향후 과제

향후 정책을 위해 생각해 볼 문제

결혼, 출산 대전제와 당위성의 약화

: 자신 스스로의 사고 결과 및 가치관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
 VS 사회적 관습이나 환경, 조건에 따른 선택

언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 생애과정 전반에 걸친 선택, 가족의 유동성/유연성

도덕적인 태도와 현실(진심) 사이 괴리

: 개인-사회 간극 최소화

실제 생활 및 삶과 제도 사이 괴리

: 빠른 변화 속 과도기

4. 가족 다양성 정책과 향후 과제

개인의 선택과 자유 존중

1.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는 제도적 환경 마련

-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을 통한 제도 설계**
 - ✓ 다양한 상황과 경우에 대한 이해
- **개인의 선택이나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 마련**
 - ✓ 가족 유형으로 인해 아동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차별 검토
- **제도적으로 다양한 관계 포용**
 - ✓ 사회가 변화를 이끄는 법제도 마련(ex.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
 - ✓ 세분화 된 통계 구축(동거 가족: 통계상 1인 가구나 비친족 가구에 포함 중)

32

4. 가족 다양성 정책과 향후 과제

개인의 선택과 자유 존중

1.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는 제도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

- **다양한 (개인) 삶의 방식에 대한 면밀한 이해**
 - ✓ 결혼의 변화, 생애 미혼(비혼), 개인 출산, 개인 양육 관련 연구
- **개인의 선택에 따른 차별이나 사각지대 발굴**
 - ✓ 인권 및 권리, 공정성 차원에서의 연구
- **실제의 다양한 관계 사이 보호 필요 영역과 사회적 합의 수준 파악**
 - ✓ 파트너십, 생활돌봄 공동체/동반자 관계 연구
 - 가족 책임 수행 자격(상대방 수술이나 응급상황 등 의료 현장 및 사망시 보호자 역할 등)
 - 사회적 지원의 혜택 자격(유족 연금, 유산 상속, 국민건강보험, 연말 정산 등 제도적 혜택 등)

33

4. 가족 다양성 정책과 향후 과제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사회

2. 다양성이 자연스러운 사회 문화 형성

- 가족 형태를 세분화 해 지원하려는 노력보다는 가족 유형이나 형태가 부각되지 않고도 포괄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 다양한 가족을 위기·취약 가족으로 보는 관점 탈피
- 다양성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구축 등
- 언론, 미디어, 작품 속 다양성 존중과 역할 강조

34

4. 가족 다양성 정책과 향후 과제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사회

2. 다양성이 자연스러운 사회 문화 형성 방향 제안

- 제도와 가족 및 개인 생활 실제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방안 연구
 - ✓ 문화적 수용성, 인식 조사 연구 등
- 다양성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환경 마련 방안 연구
 - ✓ 교육 접근 방법 및 내용 연구 등

35

2022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1차 온라인 가족포럼

토론 1

전환기 가족정책의 지향

양 정 선 실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토론 1

전환기 가족정책의 지향

| 양정선 실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1

시작하며

오늘 마련된 포럼은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한 숙고를 기반으로 하여 모든 가족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도출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을 연구하고, 그 정책을 사업으로 실현시키면서 느꼈던 딜레마와 관점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2

전환기의 인식, 전환기가 아닌 시점은 언제인가?

○ 한국 가족의 모습변화에 따른 전환기인가?

- 오늘 이 자리 즉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2022년 제1차 온라인 가족포럼 추진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한국 가족의 모습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규모와 기능, 형태 등이 빠르게 변동하고 있으며, 더욱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가 높아지고 가족 개념이 확대되면서 가족 가치관 또한 함께 변화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배경으로 2010년에 열린 포럼은 없었을까? 2030년에 열릴 포럼의 배경은 과연 얼마나 다를 것인가?
- 과연 오늘 이 시점, 작금은 전환기인가?
- 그렇다면 전환기가 아닌 시점은 언제인가?

○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환기인가?

- 더불어서 본 포럼의 목적으로 이하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음.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환경의 변화를 앞두고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이에 따른 가족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흐름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족정책과 제도가 요구됨.
- 새 정부 출범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전환기인가?
-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정부 출범이 전환기라면, 전환기가 아닌 시점은 언제인가?
- 시대적 흐름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족정책과 제도는 무엇인가?
- 지향, 원칙, 대응, 전략 등의 순기능적으로 작동하는가?

3

전환기의 인식과 가족정책의 지향

○ 가족정책의 지향, 변화하는가?

- 가족과 그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변화를 멈춘 역사적 시기는 결코 없었으며, 단지 변화의 속도에 차이가 있었을 뿐임.
- 그렇다면 가족과 그 환경의 변화에 가족정책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 2010년 여성가족부 출범 이후 여성가족부의 비전과 목표의 핵심이 되는 주된 키워드는 한동안 ‘행복’과 ‘평등’이었음.¹⁾
- ‘행복’의 키워드는 2010~2017년까지 꾸준히 비전과 목표에서 제시되어 정책을 통해 갈망하는 이상적인 상태로 제시되고 있으나 2017년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음. 반면 ‘평등’은 ‘행복’의 키워드가 사라진 2018~2021년에도 꾸준히 비전에 명시될 뿐만 아니라 성평등에서 그 개념이 확장되어 성,

1) 양정선(2020), 「기초자치단체의 가족정책 방향과 전략」,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세대, 가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평등의 개념으로 확대되었고, 더불어 작금에는 ‘존중’의 개념으로 그 지향의 폭을 확대하였음.

- ‘평등’, ‘존중’을 비전 혹은 목표로 삼아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가족의 상태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단어의 사용상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이가 동의하는 바람직한 상태가 있을 것임. 가족정책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가족의 상태를 지향하는 그 원칙을 지님. 가족과 그 환경은 빠른 속도로 급변하나, 가족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지향,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가족의 상태’에는 변화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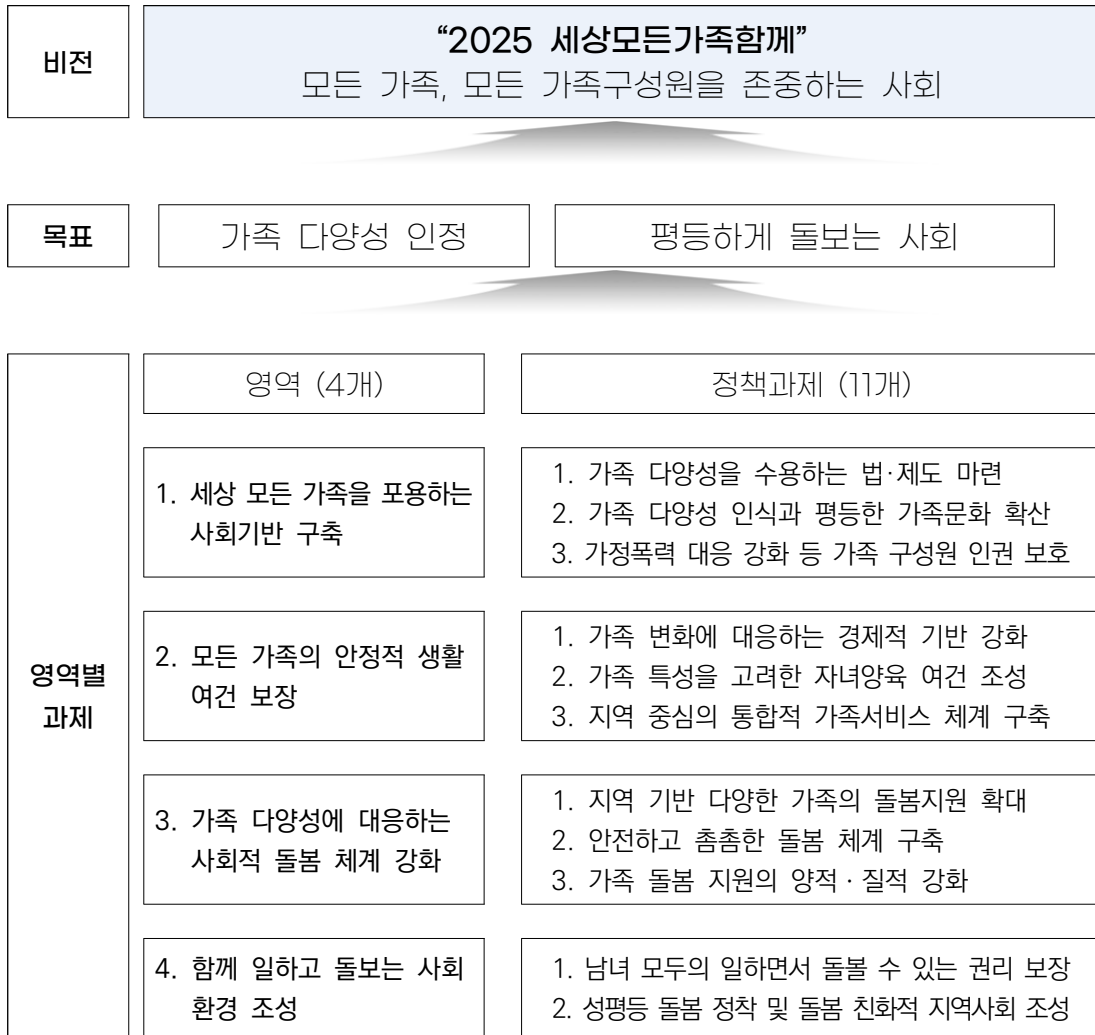
○ 가족과 환경의 변화에 동행하는 정책적 대응

- 정책적 지향, 원칙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가족과 환경의 변화는 일상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므로 삶의 지속성, 안정성을 위한 정책적 대응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재의 변화, 그 본질적 속성은 무엇인가? 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학자의 학문적 견해 및 그 시각임(예시; 성장 vs 분배, 혹은 그 조합의 우선적 원칙).
-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 중 하나는 가족이 원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에 대한 면밀한 고찰과 분석임.
- 정책적 대응은 ‘가족과 그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그러나 원칙에 충실하게’로 생각해볼 수 있음.

○ 짚어봐야 할 가족정책의 지향

- 가족을 단위로 하는 가족정책과 지원이 과연 바람직한가?
-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공평할 수 있는가?
- 현재의 가족정책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흐름에 맞는 정책적 용어를 선별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에 많은 주안을 두고 있음. 특히 자녀를 키우면서 일을 병행하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의 사회화 확대를 지향하며, 이를 성평등에 기반하여 추진하고자 함.
- 이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의 목표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 ‘가족 다양성 인정’과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로 명시되고 있음.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정책체계 〉



- 외국의 가족정책은 소득계층, 가족유형, 성별에 따른 불평등성을 완화시키려는 목적과 더불어 아동발달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분명함. 발달이 이루어져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포괄함.
- 가족정책은 가족유형에 따른 불평등성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을 지향하지만, 그중에서도 자녀를 키우는 가족의 불평등성 완화에 주안을 두고 있음.
- 외국의 가족지원 정책의 주된 목표 중에는 ‘아동초기 발달 지원(Thévenon, 2011)’이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 다수의 OECD 국가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가족정책을 설계 및 추진하고 있음(Gornick and Meyers, 2006; OECD, 2009).²⁾

2) 양정선(2020), 「기초자치단체의 가족정책 방향과 전략」,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하의 내용 중 일부는 본 저자의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음.

- 서구사회의 경우 현재의 경제성장 동력 확보와 미래의 복지재원 마련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동발달과 복지의 측면에서도 맞벌이 가계를 지원하고 있음. 맞벌이 모델은 가계의 빈곤을 감소시키고 그것은 자녀의 발달과 복지에 도움(Whiteford and Adema, 2007; Esping-Andersen, 2009)되기 때문임.
- 여성의 경제활동 단절은 가계의 빈곤과 무관하지 않고 그러한 가계의 빈곤은 아동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노력함. 우리사회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지양하고 일·삶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적 이유 안에 아동발달과 복지의 관점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명백함.
- 우리사회의 가족정책 역시 다양한 차원에서 아동양육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 발달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관점이 교육 커리큘럼과 같은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반성도 필요함. 아동 발달과 행복의 관점은 어린이집의 설치, 가정양육 체계,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의 하드웨어적인 정책 안에도 적용되어야 함. 다시말해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적 관점 못지않게 아동의 ‘발달과 행복’을 지원하는 정책적 관점이 투영되어야 할 것임.
- 우리사회 가족정책 안에 ‘성인’의 관점은 찾을 수 있으나 ‘아동’의 관점 역시 그러한 비중으로 자리 잡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아쉬움이 있음.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여성의 성별 노동분담을 극복하고 이중노동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반면,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아동의 관점에서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 사실임.
- 우리의 대다수 정책은 성인의 피로감, 성인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정책적 관점이지 그것이 아동에게 발달적 측면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정책적 관심이 수반되지 못하였음.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의 목표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에는 과연 가족원으로서의 아동의 관점도 포함되어 있는지 숙고해야 할 것임.
- 가족정책의 추진에는 차별과 불평등의 위치에 있던 여성의 관점과 더불어 발달 주체로서의 아동의 관점도 보다 깊게 수용되어야 하고, 돌봄 노동을

실현하는 성인의 피로감 외에도 돌봄에 의존하는 아동 행복의 관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아동의 관점은 아동정책에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아동 역시 가족 구성원의 일원임을 주지해야 할 것임.

2022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1차 온라인 가족포럼

토론 2

가족변동에 대응한 가족센터의 방향

장 혼 성 센터장 (경상북도 가족센터)

토론 2

가족변동에 대응한 가족센터의 방향

▮ 장훈성 센터장 (경상북도 가족센터)

1

들어가는 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존의 사회복지 유관기관과는 다른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 구성원 중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선택적이고 시혜적인 복지지원에서 탈피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가족 건강성을 위해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가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우리 사회에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이주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참여 및 가족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유사하지만 다른 각각의 정체성을 가진 두 센터의 통합으로 실천 현장의 가족 사업 종사자 중 일부는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불어 21년에 수립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종전의 가족 개념보다 훨씬 진보적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가족사업은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 도시 또는 군 지역에서는 수행하기 쉽지 않는 형태의 가족도 존재한다. 이렇듯 통합 가족센터 운영이 공고화 되지 못한 과도기 시점과 가족의 중요성이 부각 되는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개최하는 본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2

가족변동에 대응한 가족센터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전문인력 확보 “사람이 전부다”

본 토론자는 2006년부터 다문화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리고 지역센터와 광역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가족센터 설립 운영에 합목적으로 부합되기 위하여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전 종사자의 가족센터 철학 공유와 역량강화의 필요성이다.

종전의 가족복지는 구성원 중 결핍이 발생할 시 선택적 복지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존 가족복지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이주배경을 가진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역량강화를 담당해 왔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잔여적 복지와는 다른 비전을 제시하며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생애 주기별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개별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가족의 위기를 예방하는 대표적인 보편적 가족복지이다.

따라서 건가·다가센터의 통합인 가족센터는 종사자의 배경도 사회복지사와 건강가정사로 각각의 철학과 정체성으로 가족사업의 운영에 있어서도 철학의 차이를 보인다. 이에 더하여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천명되어있는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을 위한 가족정책을 실천하는데는 여러 부분에서 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급변하는 가족 개념의 변화와 가족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가족센터의 가족서비스 전달자인 종사자의 철학과 인식의 전환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종사자 중에는 종교적 배경으로 인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으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인종적 배경으로 인해 종사자 간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한다면 종사자는 보편적 복지 철학이 공유되고 인정과 포용성, 젠더와 다문화 감수성, 지역 공동체,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한 기획 능력 등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다각도로 강구되며 법적 사회적으로 제도화 되어야만 명실상부한 가족센터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다양한 가족 정책 전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 제정과 전문 종사자 확보가 필요하다.

그동안 가족센터들은 중앙부처를 이동하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전국 전 시·군·구에 설치될 정도로 지역에서의 가족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고 지역 종합 복지관 이용자 수를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의 행복 충전소의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북 모 지역 센터장은 유력 정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영입되는 등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점점 공고화되어 가고 있다. 가족센터는 보편적 가족복지 기관이 가지는 수많은 민원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노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종사자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한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나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과제인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도와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가족의 아동양육지원 강화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도 현재의 가족센터의 예산이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가족 중 이주의 배경이나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가족을 위한 전문 종사자는 현재 가족센터에서는 통·번역지원사와 이중언어 코치 정도로 다양한 가족 서비스를 위한 전문 종사자가 한정적이다. 가족센터에 다양한 가족 서비스 전문 종사자 확보 여부는 통합 가족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인력 배치의 중요성을 제안한다.

3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경북지역 가족센터의 사업 사례

수도권이나 대도시와는 다른 형태의 가족 구성원을 가진 중소도시나 군 단위 센터에서는 가족사업 실천에 있어서도 지역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맞춤형 가족 정책을 기획, 수행하여야 한다. 경상북도처럼 보수적인 지역에서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북센터에서는 “맞살림·맞돌봄”과 “컬러플 에너지 글로벌 파트너”란 비전으로 가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성주군가족센터에서는 21년부터 인근 대학에서 운영해오던 여성대학을 가족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가족센터의 홍보와 프로그램 연계 등 가족센터가 평생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소멸 대응 사업을 매년 2억씩 확보하여 지역 인력 수요가 높은 참외농사 전문가, 노인시설 돌봄 전담인력 등을 양성 관리하는 사업을 가족센터에서 금년 5월부터 시행한다.

인구소멸 위기지역이 가장 많은 경북이 지속 가능 하기 위해서는 출생 정책보다는 다양한 경북 정주형 이주민을 유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경북센터는 다문화가족이 지역 주민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이주해 온 올드 커머 결혼이민여성을 중심으로 뉴 커머의 조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브릿지 인력양성 사업으로 글로벌레이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레이디는 출신국에 수출입 바이어, 수출 설명회, 지역 생산품 라이브커머스 운영, 후배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학교 알림장 번역 서비스, 농촌 지역 외국인 일자리 연계 등 글로벌 여성들이 로컬의 생산성 확대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 3년 차인 21년 협동조합과 개인의 수출입, 화상 외국어교육, 기업 번역, 화장품 등 총 매출 4억 여 원에 이른다.

한편 19년부터 학습 취약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학업 격차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4, 5, 6학년의 주요 교과목과 정서 지원을 비대면 학습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였다. 비대면학습의 주도적 참여를 보완하고자 지역의 사범대 학생들을 학습 튜터로 매칭하여, 경북지역 11곳의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습 공간 확보와 교재 출판 비용을 제공해주고 있다. 학습지원에 참여하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은 물론 부모들은 필수적으로 부모 학습 교육에 참여하여 부모 역량 함양과 가족센터의 타 프로그램에도 연계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4

나가는 말

이제 가족센터는 지역 주민의 전 생애 주기에 맞춰 지역 맞춤형으로 그 출발을 하고 있다.

가족센터 존재의 철학은 어떠한 형태의 가족 또는 구성원이라도 위기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건강성을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가족 정책을 전달,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본 포럼의 계기로 가족센터의 새로운 방향 모색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2022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1차 온라인 가족포럼

토론 3

전환기 가족정책 방향 찾기, 개인의 선택에 대한 존중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

조 성 은 연구위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미래전략단)

토론 3

전환기 가족정책 방향 찾기, 개인의 선택에 대한 존중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

ㅣ 조성은 연구위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미래전략단)

□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문명사의 변혁기 도래

- 자국 우선주의와 이익블록화 시대로 전환되며, 어느 블록에 편입되는가에 따라 글로벌기업도 위기에 처하는 사회의 불확실성 증대
- 인공지능, 빅데이터, 생명과학 산업 등이 선도하는 지식정보화의 물결이 우리 삶의 방식에 전방위적으로 영향
- ⇒ **변혁기 가족의 불안정성 증가 및 예상치도 못했던 생활방식의 변화가 밀려들어오는데 따른 불안, 위기감 증대**

□ 저출산 초고령화사회의 진입에 따른 대한민국의 성장 정체기 도래

- 저출산 지속, 고령화 확대로 잠재 성장률 지속 하락
- 계속되는 저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약 및 계층이동 사다리 악화
- ⇒ **젊은 세대의 돌봄 부담 증가와 세대간 가치 격차 발생**

□ 지위 상승 국가에 사는 ‘내’ 삶의 질 체감 기대

-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국가지위가 변경된 유일한 나라이나 국민의 삶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움

※ OECD 회원국 중 자살사망률과 노인빈곤율은 가장 높음

※ OECD 회원국 중 국민행복지수와 합계출산율은 매우 낮음

-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함께 ‘잘’ 살 것인지에 대한 해법 모색 필요

⇒ **국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삶의 ‘질’ 문제 해결 요구 대응**

‘더 큰 대한민국’에서 더 따뜻한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한
변혁기 가족정책 방향 수립 필요

1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는 ‘가족’지원 확대

1. 변화한 결혼 및 가족관념 등의 포용을 위한 인식과 실천간 갭 줄이기

○ 세상 모든 가족의 포용(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사회가 변화를 이끄는 법제도 마련(생활돌봄공동체법)_대안가족, 대체가족의 형태
: 주거공동체 등 가족 돌봄/사회화등의 기능을 대체하는 보완책
- 개인의 선택이나 가족유형으로 인한 차별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정 강화

○ 가족의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

- 기존 가족단위 대상 지원은 개별 가족구성원(개인) 지원으로 확대
- 기존 가족의 기능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실행되어온 가족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가족의 핵가족화 소규모화, 소멸의 문제에 직시한 가족 취약기능에 대한 대안 찾기

2. 길어지고 다양해지는 가족생애주기에 맞춘 정책 필요

○ 생애주기가 길어진 청년에 대한 유능한 역량과 인성에 대한 지원 필요

- 개인과 독립을 주장하나 부모세대에 의존하는 청년기 증가(노년기 문제 과중)
- 성장기 자녀 누구나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지원(가족의 사회화기능 강화와 대안 검토)

○ 생애주기가 길어진 노인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의 노년기 자살율이 보여주는 문제에 직시
- 한국적 가족주의 내에서 준비되지 않은 긴 노후가 주는 불안감과 자녀 세대의 부담감
- 자식으로부터 독립된 노년기 생활을 꿈꾸면서도, 자식된 도리에 대한 기대 간의 갭차이로 나타나는 혼란에 대한 재정립

2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예측을 위한 ‘가족’정책과제 확대

1. 전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율과 고령화 진입 속도 맞춘 가족정책 설계필요

○ 다양한 가족을 위기/취약 가족으로 보는 관점 탈피

- 가족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 예측과 직면 필요
- 우리사회 내 가족다양성의 범위에 대한 정의와 변화 방향에 대한 이론적 틀 설계

○ 가족 소규모화 소멸 추세에 대한 전방위적 대안 검토 필요

- 가족 소규모화와 소멸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중요
- 가족 소규모화와 소멸과 관련된 가족 지표관리 필요

2. 다양성이 자연스러운 사회 문화 조성

○ 문화적 수용성, 가족 인식 조사 연구 등

- 제도와 가족 및 개인 생활 실제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연구 강화
- 특히, 가족다양성의 주요지표 관리와 간극 줄이기 필요

○ 다양성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가족환경 마련

- 청년기의 다양성을 노년기가 이해할 수 있는 환경
- 노년기의 다양성을 청년기 등이 이해할 수 있는 환경
- 가족의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을 상호 교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
- 결혼, 출산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

3

한국적 가족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가족가치 찾기가 필요

1.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존중되는 '가치'로 가족소속감과 관계 유지

2. 가족 다양성이 포용되는 '가치'로 소외받지 않는 가족생활 유지

→ 세대간 가치 간극을 줄이고, 소통을 늘리고, 상호 부담감 줄이기가 필요

2022년 제1차 온라인 가족포럼
전환기 가족정책 방향찾기 - 한국가족의 변동과 가족정책 대응

발행일 | 2022년 5월

발행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발행인 | 김금옥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4~6층

전 화 | (02) 3479-7600

팩 스 | (02) 3479-7798

홈페이지 | www.kihf.or.kr

기획·편집 | 사업기획부

수행기관 | (주)유앤아이컴

인쇄처 | 삼원그래픽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발행하거나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2022년 제1차 온라인 가족포럼

전환기 가족정책 방향찾기

한국가족의 변동과 가족정책 대응

주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후원



여성가족부